

데스크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 조사위원 추천이 미뤄지면서 특별법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주체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뚜렷한 이유 없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조만간 추천에 나서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구성에서도 조사위원 추천을 미룬 전력 있다. 또 적절치 않은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인 셈이다.

늑장 추천으로 구성 지연

여당인 민주당도 진상 조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선 민주당은 특별법 시행 당일에도 겨우 진상 조사위원 추천을 마쳤다. 5월 단체들의 조속한 조사위원 추천 요구가 빗발쳤지만 민주당은 한동안 이를 외면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진상 조사위원 추천을 미치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늑장 추천에는 정치

걱정된다 5·18 진상조사위

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8월말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당내 데스크포스(TF:특별전담조직)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8·25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정치적 눈치 보기가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유력 당권 주자는 당내 TF 위원에게 추천을 늦춰 달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조사위원으로 특정 인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는 조사위원 추천에도 작용했다. 당내 TF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지도부 인사들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

실제로 송선태 상임위원의 경우, 홍영표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초 TF에서는 특검 출신인 최병모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홍 원내대표의 전방위 압박에 따라 무위로 돌아갔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와 송 상임위원은 이해찬 총리 시절 국무총리실에서 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다는 점에서 과거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윤정 비상임위원 선정에도 당 고위 인사의 힘이 작용했다. 당내 TF는 안전 전남대 교수를 추천했지만 군 출신인 이상춘 교수를 교체하겠다는 압박에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송선태 상임위원과 이윤정 비상임위원의 경

우 자격이 미달된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정당한 절차다.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인사들이 조사위원 선정을 좌지우지하려 면 TF를 구성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가 조사위원장을 맡느냐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원장은 민간 조사위원을 선정하고 파견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5·18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탁월한 리더십과 전체판을 꿰뚫는 안목, 비협조적 정부 부처를 압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조사위 출범 초기에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인사가 위원장에 선임돼야 힘이 실린다. 법리적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법조인들을 조사위원으로 추천, 법을 근거로 진상 조사 활동에 탄지를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관급인 조사위원장은 상임위원은 물론이고 사법부 출신인 인사도 포함될 수 있다. 안전총괄 차관급인 인사도 포함될 수 있다. 안전총괄 차관급 인사도 포함될 수 있다. 안전총괄 차관급 인사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안 소장이 상임위원으로 적절하느냐에 대한 민주당 내외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안 소장이 5·18 관련 분야 전문가이긴 하지만 지난 2월 민주당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추천에서 탈락하

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진상 조사위는 계엄군의 발포 체계, 행방불명자 암매장 장소, 계엄군의 반인권적 행위 등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의혹과 의지만으로 5·18의 진상이 규명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5·18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및 헬기 사격 진상 조사는 국방부에서 특별조사위까지 구성했으나 기존의 의혹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역량 갖춘 위원장 선출해야

또 문 대통령은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 정부 차원의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진상 규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만큼 진상 조사위의 뛰어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5·18 진상 규명은 시대적 과제다. 진상 조사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시간은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각 당의 조사위원 추천이 완료될 때까지 상임위원 추천 인사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도 남아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권의 집단 지성과 국회의장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tuim@kwangju.co.kr

은펜칼럼



한국한
광주교대 외래교수

필자는 학생 시절부터 국가·사회적으로 존경할 인물들을 보는 것이 소망이었다. 특히 정치인이나 경제인 중에서 더욱 그랬다. 그들은 정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되었으며 사회 전체적인 큰 파동과 충격을 불러왔다. 지난 7월 23일 노회찬 의원이 숨진 안타까운 소식이 '민중의 친구를 잃었다' '진보정치의 아이콘을 잃었다' '진보의 별을 잃었다' 등의 댓글이 있었다. 심지어 도을 김용욱 교수는 그를 '우리 시대의 예수'라고까지 했다. 필자는 이들의 댓글에 많은 공감을 하며 '악자의 편에서 양장서 싸워준 보배' 동료로 잃은 느낌이었다. '훨씬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도 뻔뻔하게 활동하는데, 자신에게 더 관대했다더라면 좋았을텐데'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남긴 메시지

그가 토론 때 언급하는 말들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사람과 소외된 사람의 편에서 철저히 그들을 대변했던 생애를 모두 오래 기억할 것이며 이게 바로 역사의 한 페이지다. 그는 의원 생활 7년 동안 1029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호주제 폐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정리 해고 제한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동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인행일치'를 위해 몸부림쳤다.

그렇기에 조문하는 사람들에게 좌우와 보수·진보의 구분이 없었으며, 기록적인 폭염 속에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분향소를 찾았다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았다. 특히 자신들에게 관심을 쏟은 노 의원을 기리는 국회의 정소하는 여성 19명의 모습에서는 그가 약자와 함께했던 행적을 여실히 엿볼 수 있었다.

필자는 그의 소천 2개월 되는 즈음에 그가 남긴 메시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첫째, 소신과 책임의 정치다. 그는 확고한 정치 철학으로 소신 있게 활동했다. 한평생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그를

대변해왔고, 융점공으로 노동 현장을 체험했으며 진보 정당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초지일관 외길을 걸었다. 그러나 2년 전 의원 아닌 신분으로 급뚝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데 대해 고만했고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둘째,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다. 그는 특권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수많은 국민의 그에 대한 추모 열기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었다.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국민 형세로 세비 등 1억 4천만 원과 각종 보조비, 특수활봉비(특별비) 등을 받으며 200여 가지 특권을 누리다. 그러나 노 의원은 소신으로 특권 없는 회의를 만들기를 늘 노력해왔다. 그가 마지막 발의한 법안이 국회의원 특별비 폐지이며 받은 특별비를 일괄 반납하기도 했다.

셋째, 국회의원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 갖기다. 의정 활동은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정파 간 싸움과 각종 불법으로 그 신뢰도가 쇠퇴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심히 그들의 활동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며 불성실한 의원의 국민 소환 운동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결국 부패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학습했으니 이제 이 사실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국회의원, 그들은 늘 개점 휴업의 국회를 만들며 싸움질만 하면서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각종 특권을 누리니 '최고의 갑질 집단'이다. 내년 국회 특별비는 일부 폐지하거나 소폭 삭감될 전망인데, 이 또한 그 실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터이다.

지금 세계는 정치·경제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기술·정보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군다나 미·중의 무역 전쟁, 그리고 중국의 아프리카 대륙 점수를 눈앞에 둔 상황에 우리나라의 각종 특권과 불법, 그리고 세금 도둑까지 감시해야 하는 판국이다. 이제 우리는 주인 정신으로 냉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는 안창호 선생의 외침이 요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기고



박성열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국내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현재 3만 2000명에 육박한다. 이들이 다수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 의원을 배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필자는 대학에서 남북한 관계를 강의하면서 탈북민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곤 한다. 탈북민 A(남·36세)는 북한에서 중학교 수학 교사로 일했다. 교사 월급이 장마당(북한의 시장)에서 쌀 한가마도 살 정도가 못돼 생활고를 걱정하다가 8년 전 중국을 통해 탈북하였다. 그는 남한에 와 같은 탈북민을 만나 연애하다가 1년 전 결혼하였다. 남한에 와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연애 기간중 애인과 대만으로 해외 여행을 갔던 기억을 꼽았다.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해외는 고사하고 국내 이주도 제한을 받았기에 남한에 넘어와 여권을 받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꿈만 같았고, 자유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탈북민 B(여·48세)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남한으로 가족과 함께 왔다. 북한에서는 도서관 사서 겸 조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녀는 남한에서 특정한 직업은 갖지 않고 주변의 소개로 알게 된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 그런데 처음 성경을 접하고, 집에 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북한에서 평생 배워 온 김일성 숭배와 주체사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유일 신앙과 너무 똑같아서 충격을 받았단다. 그녀는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며 아직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중이다.

탈북민 C(여·45세)는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먼저 넘어온 남편을 찾아 남한으로 왔다. 아코디언 연주와 노래를 잘하는 그녀는 북한에서 이른바 '기쁨조'에 뽑힐 뻔 했으나, 키가 작아 탈락했다

고한다. 남한에서는 아코디언 연주와 좋은 연명으로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으로, 맨 처음 강연 활동 후 받은 첫 보수(20만 원)에 감격해 집에 가서 평평 울었다고 한다.

이들 탈북민들을 접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점이다. 이들은 탈북 경위가 어찌됐든 인생을 걸고 넘어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부각되면서 불편하거나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탈북민을 문제가 있어 넘어 온 사람들로 폄하하고 있고, 앞으로 남북통일 과정에서 걸림돌로 여겨는 분위기도 느낀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김정은 정권과 협상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나, 북한 체제의 폐쇄성이나 노동당 독재 체제까지 미화될 수는 없으며, 이런 북한 체제를 피해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우리 헌법과 관련법상으로도 탈북민은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오히려 '먼저 온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국내에 잘 정착하도록 적극 도와줄 필요가 있다.

광주와 전남에는 1100여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국내 입국 후 하나원에서 12주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희망 거주지로 우리 지역을 선택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생활 보호 대상자이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센터나 일부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들의 정착과 자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교류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추석을 맞아 지자체가 나서 탈북민들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社說

지역 치매안심센터 대부분 개점휴업이라니

광주·전남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유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치매 환자는 6만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전남이 4만8602명으로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치매 유병률을 보면 전남은 12.13%로,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2명은 치매 환자라는 의미다. 광주는 치매 유병률이 9.87%이고, 전국 평균은 10.32%다. 치매 유병률도 2012년 10.40%에서 2018년 12.13%, 2020년 12.28%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령화 추세보다 치매 인구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세운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안심센터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 치매안심센터 27곳 가운데 정식 개관한 곳은 광주 동구와 목

포시 두 곳만 있을 뿐이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 막무가내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한 곳씩 치매안심센터를 설립, 환자 관리 등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지기다.

이후 정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국 256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열기 했지만, 현재 정식 개소한 곳은 30여 곳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에서도 전체 27곳 중 광주 동구와 목포시 두 곳만 정식 개소했을 뿐 나머지 25곳은 정부 평가에 미흡한 면에서 놓은 상태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다. 정부는 예산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개점휴업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서둘러야

가습기 살균제와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 구제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소비자 집단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도 공동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고, 민사 소송의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어 불합리하다"며 소비자 집단 소송을 이반 국회 회기 안에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 집단 소송은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

이런 탓에 연비 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소비자 1인당 1100만 원을 배상한 것과 달리 한국 소비자에게는 100만 원 가량의 쿠폰만 제공해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인 수밖에 없고 사업자는 이런 점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더 많은 불법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추세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최근 "집단적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 소송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 소송의 대상을 제조물 책임, 담합, 부당 표시 광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위해 식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더 이상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했다. 11년 만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평양을 방문한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김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를 통한 하늘길로, 노 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물길로 평양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위해 이용한 서해 직항로는 2000년 6월 13일 김 전 대통령의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남북이 분단된 지 55년 만에 연결된 하늘길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서해 공해상으로 빠져나간	
서해 직항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다면 한반도 종전과 비핵화 선언은 올해 안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서해 직항로보다는 남과 북을 바로 잇는 여러 항로가 신설되고 철도·도로 협력 등이 차근차근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